

행 정 법

2012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은 乙로부터 면적 300m²인 토지에 건축면적 100m²인 가옥과 담장을 1980.

12. 31일자로 매수하여 등기한 후 소유하고 있었다. 甲은 그 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그러나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A市는 2012. 6. 1일자로 甲에게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담장을 철거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철거통지서에는 甲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30m²는 A市 소유의 도로로 현재 甲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2012. 7. 31일까지 위 담장을 철거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총 40점)

- 1) 甲은 아무런 하자 없이 乙로부터 토지와 가옥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평온히 소유하여 왔으나,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A市는 토지의 일부가 A市 소유의 도로인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甲은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는가? (15점)
- 2) A市는 담장의 철거를 강제집행할 수 있겠는가? (10점)
- 3) 철거통지서에는 철거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불법점유 상태이므로 철거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면, 甲은 이를 근거로 위 철거명령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15점)

제 2 문. B市 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정보공개제도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주민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B市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다. B市 정보공개조례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B市 정보공개조례는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적법한가? (10점)
- 2) B市 정보공개조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10점)
- 3) B市 정보공개조례가 자치사무만이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설명하시오. (10점)

제 3 문. 甲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甲의 위치정보사업 관련 계획의 타당성 및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한 후에 허가기준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총 30점)

- 1)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정·공표한 위 사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甲의 허가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甲은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15점)
- 2) 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甲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수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취소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5점)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장